

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최종확정 시행은 11월 → 내년 4월로 늦춰져

최종 편입완료시점 11월로 동일
기재부 “투자자 편의 고려한 조치”
“대내외 불확실성 간접영향” 해석도
최대 560억 달러 자금유입 기대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이 최종 확정됐다. 다만 실제 편입 시점은 당초 올해 11월에서 내년 4월로 5개월 연기됐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글로벌 채권지수 제공업체인 FTSE 러셀은 한국의 WGBI 편입을 공식 발표하고, 편입 시작 시점을 내년 4월로 조정했다. 당초 계획됐던 분기별 편입 방식은 월별 분할 편입으로 변경됐으며, 최종 편입 완료 시점은 기존과 동일한 2025년 11월이다.

FTSE 러셀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조정, 시스템 테스트 수요 등을 감안한 기술적 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일본계 투자자의 비중이 40%에 달하는 점에서, 실거래 준비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변경이 투자자 편의와 시장 안정성을 고려한 조치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제도 개선과 관련한 추가 요청은 없었고, 오히려 시장과의 소통과 개방 의지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국채 시장 자체의 문제였다면 편입 완료 시점까지 조정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불확실성이 편입 시점 연기에 미쳤을 가능성은 0%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에선 최근 한국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에 취약한 산업 구조, 대통령 탄핵 이후 계속된 정치적 혼란 등이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흔들었고, 이로 인해 편입 일정이 미뤄졌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해외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지난 8일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0.7%로 한 차례 낮췄다. 이는 일주일 전 1.2%에서 0.9%로 조정된 데 이어 다시 하향한 것이다. 지금까지 WGBI 편입이 확정

된 이후 편입 시점이 조정된 사례는 없다는 점도 이러한 해석에 무게를 실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올해 안에 기대됐던 외국인 자금 유입, 국채 조달비용 경감, 환율 안정 등의 효과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정부는 WGBI 편입으로 최대 560억달러(약 75조원) 규모의 자금이 국내 채권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증권가에선 단기적으로 원화 강세 기대가 약화되고, 국고채 금리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WGBI 패시브·액티브 자금 유입 시점이 늦춰지며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 가능성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FTSE 러셀은 과거 중국 사례에서도 투자자 준비 상황에 따라 편입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해 왔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시작될 WGBI 편입이 한국 채권시장의 외국인 기반을 넓히고, 외환 시장 안정 및 자금조달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9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취업자 늘었지만... 청년 등 ‘고용한파’ 지속

통계청, 3월 취업자수 0.7% 증가
보건업 늘고, 건설·제조업은 급감

지난달 취업자 수가 20만 명 가까이 늘어나며 11개월 사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내수와 부동산 침체로 인해 건설업·제조업 부문과 청년층의 고용 한파가 이어졌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5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58만9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9만3000명(0.7%) 증가했다. 3월 증가 폭은 지난해 4월(+26만1000명)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고용률(15세 이상) 역시 62.5%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p) 올랐다. 3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은 69.3%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하지만 산업별, 연령대별로 따져 보면 고용시장 명암이 갈린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1만2000명),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8만7000명), 금융 및보험업(+6만5000명)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크게 늘었다. 반면 건설업(-18만5000명), 제조업(-11만2000명), 농림어업(-7만9000명), 도소매업(-2만6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급감했다. 건설업은 11개월, 제조업은 9개월, 도소매업은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36만5000명)과 30대(10만9000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이에 반해 20대(-20만2000명), 40대(-4만9000명), 50대(-2만6000명)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했다. 15~29세 고용률은 44.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p 떨어졌다. 3월 기준으로는 2021년(43.3%) 이후 최저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집값 뛰자 대출 ‘꿈틀’... 가계부채 1.4조 ↑

한은, 3월 가계대출 잔액 1145조
신용대출 줄고, 주담대 증가 영향
주담대 잔액 909.9조, 2.2조 증가

지난달 은행권 가계부채가 1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은 감소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가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라서, 시차를 두고 오는 4~5월 주담대가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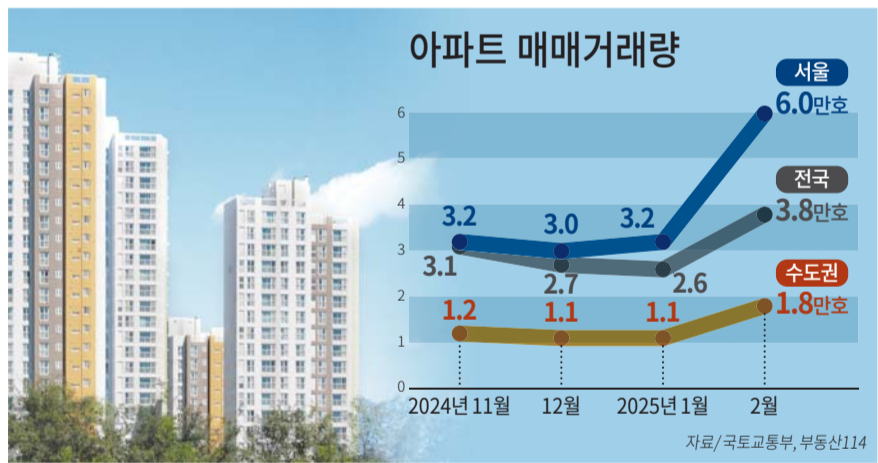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45조원으로 한 달 전보다 1조4000억원 증가했다. 1~3월을 모두 더한 가계대출은 4조1000억원으로 ▲2023년 -8조1000억원 ▲2024년 3조5000억원 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가계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주담대가 늘어난 영향이다.

주담대 잔액은 909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2000억원 늘었다. 전월 증가 폭(3조4000억 원)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흐름을 이어갔다.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 잔액은 234조2000억원으로 9000억원 감소했다. 신용대출 감소 폭보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커지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박민철 금융시장국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담보대출은 시차를 두고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주택거래가 둔화한 영향이 반영되면서 증가 폭이 축소됐다”며 “기타대출은 상여금 유입, 부실채권 매·상각 등 계절요인이 반영되면서



기타대출 감소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가계부채 증가 폭은 4~5월 더 커질 전망이다. 2월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시차를 두고 주담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올해 1월 3만2000호에서 2월 6만 호로 2배가량 증가했다. 전국이 같은 기간 8000호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박 차장은 “토허제 해제 이후 2~3월 중 주택 거래가 늘어난 영향은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2분기(4~6월) 이후 집중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토허제 해제 후 한달만에 강남3구와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토허제 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것은 주택거래량을 둔화시켰지만, 주담대를 포함한 가계대출의 흐름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준금리가 인하하며 대출금리가 떨어

지면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또, 토허제 등 규제가 비대상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및 5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참석했다.

권 처장은 “가계대출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3월 부동산 규제 제시행 이전 활발하게 이뤄진 주택 거래는 다소 시차를 두고 가계부채 통계에 반영되는 만큼, 4월 이후가 향후 가계대출 관리에 있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권 처장은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살펴보고, 금융권과 함께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누적신청자 12만명

캠코, 누적 신청 채무액 19.4조

경기침체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많아 채무조정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3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의 누적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11만 9768명, 누적 신청 채무액은 19조3684억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자는 지난해 연말 10만3658명에서 지난 1월 10만 8387명, 2월 11만3897명, 3월 11만 9768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신청 채무액 역시 지난해 연말 16조 7305억원에서 지난 1월 17조5004억원, 2월 18조4064억원, 3월 19조3684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연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가 심화되지 않도록 채권을 인수해 채무조정을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전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지난해 말 기준 3만2293명이 약정을 체결했고, 채무액은 2조6721억원,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로 확인됐다.

/안승진 기자 asj1231@

OECD, 韓 성장률 전망치 2.1→1.5% 내려

▶▶ 1년 ‘원화값 16년래 최저...’서 계속

◆ 한은·OECD, 성장률 전망치 하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1%에서 0.6%p 낮춘 1.5%로 수정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전망치를 2.0%에서 1.5%로 하향했다. 한은도 국내 경제 성장률이 1.5%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OECD가 제시한 세계 경제 성장률이 3.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0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상헌 iM증권 전문위원은 “국내 성장률의 하향 조정 분위기는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압박을 가중할 공산이 크고, 원화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의 시장 개입이나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등 환율의 추가 상승 제약 요인에도 상호관세와 미·중 환율전쟁 리스크가 환율을 1500원까지 상승시킬 수 있는 악재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